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

김 영 곤*

I. 개 요

1. 사업 개요

개성공단 개발사업 등 경협사업의 본격화로 대북 진출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2005년 1월 31일 시행에 들어갔다.

금번 제도개선에서는 개성공단내 투자자산을 정식담보로 인정하였으며, 북한내 건설중인 시설물을 완공시 담보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공사기간중 신용으로 대출하는 후취담보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기업의 북한소재 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밖에 북한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과 산업용지 분양권 구입을 위한 대출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등 대북거래 현

실에 맞춰 대출상품을 다양화함으로써 대북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 지원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측기업이 사업시행자로서 북한내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정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자금 대출제도'도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내 전력, 통신 등 기반시설 투자사업이 수혜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증가하는 기금 대출수요에 대처하고자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협조대출제도 취급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대북 진출기업은 기금과 협조대출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 경협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기금의 금융주선기능이 강화되는

*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심사역

등 민간경협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Ⅱ. 대출제도 개선내용

1. 북한소재 자산의 정규담보 인정

지금까지 북한에 투자한 기업들은 북한내 투자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식담보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금번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지원지침’의 개정으로 북한소재 자산에 대하여 정식담보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적용되는 지역은 북한내 관련법령에 의해 재산권 및 저당권이 보장되고 등록, 경매절차 등이 명시되어 담보취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즉 개성공업지구와 기타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담보물 대상으로는 토지이용권(공장부지), 건물 및 기계·기구 등이 있으며 기계·기구는 공장저당의 형태로만 담보취득이 가능하다. 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은 토지이용권의 경우 분양가의 70%, 건물은 취득가의 90%에 대해 60%, 기계·기구의 경우 감

정가액 또는 조사가액의 40%이다.

이렇게 산정된 담보금액에서 선순위 담보 한도액, 임차보증금 등을 차감한 유효담보가액은 여신금액대비 일정비율(토지이용권 110%, 건물 125%, 기계·기구 145%)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후취담보제도 도입

후취담보제도는 부동산의 완공시점에서 정식담보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공사전에 미리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가. 취급요건

취급요건은 계획시설공사 즉 대출자금으로 건축하거나 구입하는 시설공사이어야 하고, 대상자산이 지정지구내 소재하여야 한다. 지정지구란 북한내 관련법령에 의해 재산권 및 저당권이 보장되고 등록, 경매절차 등이 명시되어 담보취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즉 개성공업지구와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또한 신청자의 기업신용등급이 P4¹⁾ 이상이거나 부채비율²⁾(동종업계 대비 3배 범위 내), 자기자본회전율³⁾(동종업계 대비 1/2 이상),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3년

1)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분류시 4등급 이상을 의미한다.

2) 총부채 ÷ 자기자본

3) 순매출액 ÷ 자기자본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지원규모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출금액은 소요자금의 70%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공사기간중 후취담보 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신용대출한도에서 제외한다.

다. 이자율 적용

공사기간중 후취담보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물적담보중 부동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담보를 재평가하여 해당 대출이자율을 조정하게 되는데 대출이자율 조정시 적용되는 기준금리 및 신용위험가산율은 당초 지원방침 결정시점의 대출이자율 결정기준에 따르며, 조정된 대출이자율은 공사완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징수일로부터 적용한다.

라. 담보관리 등

후취담보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중 양도담

보를 취득하게 되고 완공후에는 준공기성고 조사와 감정 또는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저당권 등 담보를 취득한다.

3. 경협사업 지원제도 다양화

가. 운전자금대출 도입

(1)대출대상

대출대상은 북한내 현지법인(지사, 공장 포함)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①수출입은행 기업신용등급이 P5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기업이 연대보증하는 경우 또는 ②금융기관 지급보증서, 물적담보 등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③기금이 이미 지원한 사업으로서 북한내 현지법인의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2)대출금액

대출금액은 아래표의 기업신용등급별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소액의 개·보수 투자에 대해서는 1억원 범위내에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1회전 운전자금은 북한소재 법인(지사,

기업신용등급별 운전자금한도

기업신용등급	대출한도
P1 ~ P2	1회전 운전자금 × 120% 이내
P3 ~ P4	1회전 운전자금 × 110% 이내
기 타	1회전 운전자금 × 100% 이내

공장 등 포함)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추정매출액의 40% 이내 또는 (추정매출액 - 감가상각비) × 1회전기간/365로 할 수 있다. 북한에 이미 진출한 사업에 대해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매출액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차주가 대출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차주의 신용도, 북한내 현지법인의 매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출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대출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3회까지 가능하고 연장시마다 대출금액의 1/4을 상환하여야 한다.

나. 산업용지 분양자금대출 도입

(1)대출요건

대출요건은 남한주민이 북한당국의 허가를 받아 조성하는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로 단지내 산업용지가 사전분양되는 경우로서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기업의 재산권(소유권, 저당권 등)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한다. 신청기업은 수출입은행 기업신용등급이 P5이상인 자로서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부의 경제협력사업 승인 취득 및 공장건설 착공 등 사업추진이 가능하여야 한다.

(2)대출금액

대출금액은 산업용지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70%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3)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산업용지 분양자금을 포함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하거나 대출집행후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착공 등 사업추진이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자금 대출 구체화

(1)대출요건

당해 사업이 ①남북교류협력 촉진 및 기반조성에 기여하거나 남북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서, ②당해사업의 사업성이 시장의 일반 차입조건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시장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이 곤란하며, ③사업시행자 또는 차주의 신용도가 우량하고 당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영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된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유관부처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받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업지원 보장 또는 확약을 취득하

여야 하며, 사회간접자본 시설 준공후 사업 시행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갖는 기간이 대출기간 만료후에도 10년이상 존속하는 계약이거나 기타 통일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2)대출금액

대출금액은 당해사업 시행에 있어서 남한 주민에게 소요되는 총사업비용의 80%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3)대출조건

대출기간은 사업규모, 미래현금흐름,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최장 20년(거치기간 7년 포함)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대출이자율은 미래 현금흐름, 사업의 성격, 시장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연 3%이내에서 결정한다.

라. 투자자금 대출조건 개선

경제협력사업의 경우 북한 투자환경이 열악하여 수익성 확보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금의 대출기간을 현행 8년(거치기간 3년 포함)에서 10년(거치기간 5년 포함)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은 대출금 상환부담을 덜게 되었다.

4. 협조대출제도 도입

가. 취급원칙

협조대출제도는 향후 남북협력기금 재원의 부족에 대비하고 민간자금의 대북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협조대출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남북협력기금과 협조대출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한한다.

지원조건중 대출기간 등은 기금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되 참여은행의 대출이자율은 당해 은행 내규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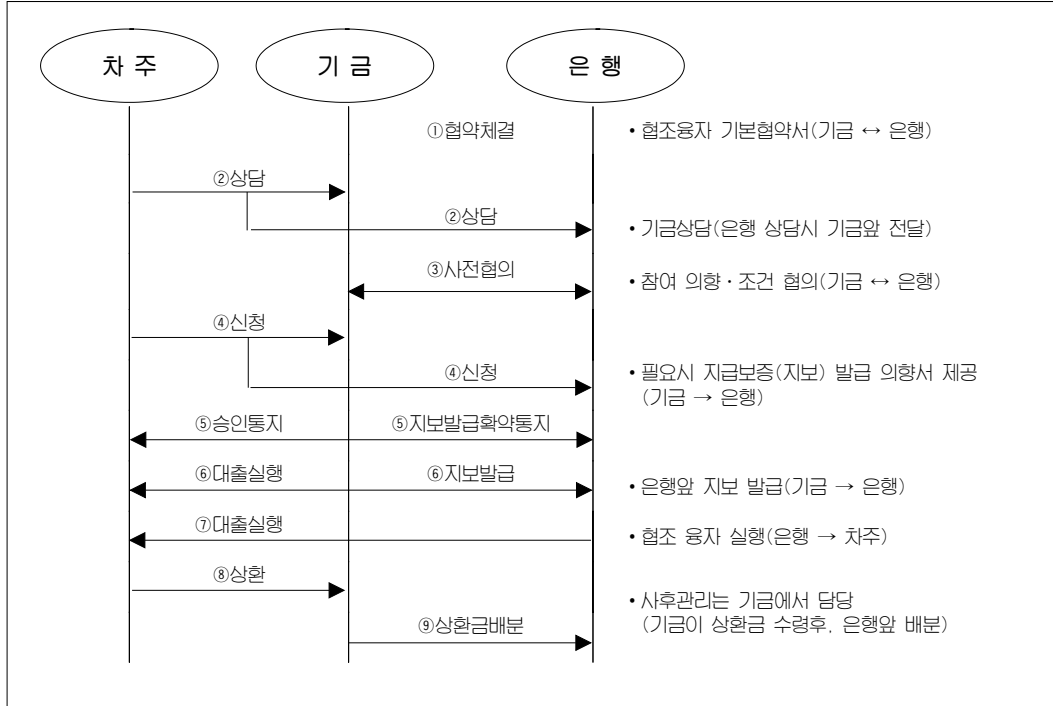
나. 채무보증

기금은 차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협조대출 참여기관의 대출취급분에 대하여 채무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채무보증금액은 보증대상 대출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85% 이내에서 가능하다. 다만 차주의 신용상태가 우량하다고 인정되거나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할 수 있다.

다. 취급절차

기금수탁 관리자는 차주로부터 협조대출 참여기관의 대출취급 동의서를 대출승인 또는 채무보증승인 신청시에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협조대출 참여기관의 대출의사가 확인된 경우로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집행전까지 이를 제출받을 수 있다.

라. 협조대출 절차



5. 손실보조제도 개선

교역 손실보조의 경우 위험부담 크기에 따라 기준요율을 차등화하여 비상위험만 담보하는 경우에는 기준요율의 60%를 적용하고, 기금의 선택에 의해 일부 신용위험담보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기준요율의 80%를 적용한다.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기금

은 신용위험(파산, 지급거절, 지급지연, 계약불이행)중 일부 위험(예 : 계약불이행위험)을 제외할 수 있다.

경협 손실보조의 경우 손실발생 인정요건으로 수용·전쟁·약정불이행 위험에 기인한 사업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하였다.⚡